

# 南.北韓 國際收支部門의 比較評價



1972. 5.

韓 昇 洙







## 1. 서 론

궁극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한다는 命題에 異論은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론의 근간은 개개상인, 개개생산자, 개개투자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투자하고 생산하며 교역하는데 있다. 비록 정부의 간섭이 있더라도 이는 개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중재적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무역 이론에서 보면 최대의 복지는 자유무역하에서 가능하다 한다. 물론 이러한 이론이 근거한 여러가지 가정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지만 대체로 자유무역의 이득에 관한 한 서구 경제이론은 확고하다 하겠다.

반면에 착취는 맑스주의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 이론이 국제경제학에 적용된것이 교역조건이다.

맑스의 자유무역觀은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자본주의 무역은 자본의 수출이 없는데 공업국가에 의한 非공업국가 착취이다.

만일 자본의 수출이 있는 때는 그 착취度가 倍加한다.

왜냐하면 공업국이 노동이 함유된 생산품을 후진국에서 뺏어낼뿐 아니라 이 수출된 자본으로 후진국 인구의 노동이 생산한 잉여가치의 일부분도 흡수하는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때오로지나 국내조직은 다르다 하여도 소비엘경제형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교역한다. 이러한때 반드시 쌍무적 (blatevol) 인 것은 아니나 사회주의 국가간에 교역할때는 쌍무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간에는 한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수만큼 시장의 수요가 많으며 양국 관료간의 복잡한 흥정을 통하여 교역이 행하여 진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수한 무역행태는 수입하기 위해서만 수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막대한 무역적자는 찾아 보기 힘이 들다.

이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무역이론과 무역행태를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과 대비하여 고찰하겠으며 국제수지의 조정메카니즘에 관하여 자본주의 체제하의 조정메카니즘과 비교하여 설명하겠다.

같은로 한국과 북괴의 국제수지를 개관하고 한국국제수지에 나타나는 갖가지 취약점을 나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겠다. 다만 북괴의 무역 및 기타 국제수지에 관한 자료가 미비함으로 뜻하는 대로 비교연구가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할 뿐이다.

## 2. 兩 體 制 下 의 貿 易

자본주의 경제체제下에서나 사회주의 경제체제下에서 무역은 복지향상의 한 수단으로 생각되는데 별 차이는 없다.

다만 복지의 개념이라든가 가치판단이 판이할 뿐이다.

개인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무역이란 개개인에 적용되는 교환조건을 일반화한것에 불과하나 사회주의경제체제下에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가장 큰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외국과의 무역은 사회간의 경제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외국과의 무역의 구성이나 방향이 근본적으로 시장메카니즘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무역에 관한 결정이란 지방분권적이라 볼 수 있으며 대개 경쟁조건下에 운영되고 있는 私기업체들이 이윤추구라는 동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비록 공기업체들이 무역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들과 같은 시장조건이나 상업적고려에 의하여 무역행위를 하게된다. 물론 근대에 이르러 관세, 보조금 혹은 환율의 조작으로 국제시장에서 자유로운 시장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참여가 없는 것이 아니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시장메카니즘, 즉 수요공급을 영향주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지 결코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시장메카니즘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정부간섭이 직접통제의 형태라든가 혹은 완전금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GATT 나 IMF규정에 의하여 제약

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下에서는 시장메카니즘보다 計劃이 우선한다. 외국과의 교역 총량이나 구조 및 방향은 장기계획(10년내지 20년) 중기계획(5년 내지 7년) 및 단기계획(12개월과 3개월)에 의하여 결정된다. 무역계획은 무역성이 작성하나 관계부처, 무역기관, 산업협동체 및 관계기업체(생산및 소비)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진다. 이 무역 계획은 정부계획의 일환으로 중앙기획기구에 의하여 공산당의 일반 사회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정통합된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수출에 중점이 두어지는것 같으나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수입이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정수입품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때문에 계획과정에서 우선하며 수출은 이렇게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희생이라 본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무역 계획을 목표달성을 성취하며 애로(bottle neck)를 극복하기 위한 일반경제계획의 보완계획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시장메카니즘이나 이운동기가 건전한 경쟁심을 불러 이르게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며 따라서 생산과 교역의 국제적 패턴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이용된 자원으로 부터 최대의 수확을 얻도록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안정과 규율성있는 발전이 크게 중요하다 생각되며 시장기구의 자유로운 운용은 이러한 안정을 너무 자주 저해할 것이라는 관점이 강한 것이다.



### 3. 무 역 이 론

서구경제학자들이 무역이론에 공헌한바는 지대하다 하겠다. 반면에 사회주의 경제학에서는 무역이론이 아직도 미개발되어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맑스나 엥겔스가 무역을 하나의 특수분야로 생각하여 따로 연구하지 않았으나 국제무역의 원인, 자본주의 생산방법의 발전과정에 접하는 세계시장과 무역의 역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무역이 이윤율,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대강 분석하였다.

로사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는 그녀의 資本蓄積論(The Accumulation of Capital)에서 비교적 더 명확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룩셈부르크의 관심은 자본주의제도의 발달에 있어서 수출팽창의 중요성에 있었다. 물론 그녀는 무역을 포함한 일체의 집단주의 경제체제는 어떠한 경제법칙에도 규제받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었다. 레닌은 자본주의 체제 밑에서의 불균형한 경제 및 사회발전을 주로 다루었고 그것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독과점체제가 개발안된 屬領에 제국주의적 침투에 관하여 연구를 한바 있다.

사회주의 국가(즉 소련)의 설립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무역이론에 대한 흥미는 거의 없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이론가들은 사회주의국가의 무역문제를 소련연방국의 무역문제와 거의 동일시 하였던 것이다.

무진장하고 다양한 국내 천연자원이 풍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본주의 국가群으로 부터 위협을 느꼈던 소련연방의 발전전략은 국내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었으며 제2차대전 이후에도 이러한 소련理論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원용되었으며 스탈린의 사망(1953년)이 있기까지 거의 무역에 관한 깊은 이론적 연구가 없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초기부터 무역에 관한 사회주의 국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과장된 경제적 자주독립의 주장은 곧 여러가지 애로(Bottleneck)를 야기시키기 시작하였고 국제간의 교역으로 부터 획득될 이득에 관해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스탈린의 사망이후 Comecon의 활동이 강화되어 사회주의국가간의 "공동시장"의 역할을 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무역에 관한 관심내지 그 이론 형성에 있어서 소련의 공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창조적 이론은 동구라파의 사회주의국가로 부터 연유하였다는 사실은 주시할만 하다 하겠다.

소련연방이나 중공에 비하여 동구제국은 자원은 적으나 경제발전에 관한 야망을 결코 작지 않았다. 주로 이들의 관심이 되었던 무역이론은 세가지였다 보겠는데 우선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접하는 외국무역의 역할, 둘째 외국무역의 효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개발국가에 있어서 국제무역의 의의등이라 하겠다.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접하는 외국무역의 역할에 있어서는 두가지

문제가 다루어졌다.

첫째는 중앙계획을 통하여 경제성장율을 가일층 높일때 어느정도까지 질적으로 또 량적으로 외국무역을 이용하여야 될것인가 하는 문제였고 둘째는 Comecon 에 참가하는 사회주의 국가간의 교역과 국제특화에 관한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외국무역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헝가리를 비롯하여 체코, 폴란드 및 동독에서 굉장히 깊게 연구되었는데 이는 주로 무역의 효율성의 기준이 무엇이며 생산수단이 국유화되고 국내 가격구조가 비정상적이며 공공 환율이 비현실적인 계획경제에 있어서 외국무역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指數와 係數를 창출해 내는 것이었다.

물론 이 효율성문제는 수출의 효율성, 수입의 효율성 그리고 투자의 무역효율성에 관한 것이었다.

미개발국에 있어서 외국무역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생소하나 주로 무역이 얼마나 서구의 공업국가들에의 경제의존도를 높도록 하였는가 하는것과 경제후진성의 역사적 원인을 주로 다루었다.

자본주의 이론가와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연구분야나 흥미가 대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구의 무역이론은 ㉔무역으로 부터의 이득 및 ㉕국제무역의 조정메카니즘인데 반하여 사회주의 무역이론가의 흥미의 대상은 ㉖국제무역의 사회경제적 근거와 영향 및 ㉗중앙통제에 의한 경제발전에 접하는 외국무역행위와 역할이라 보겠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것은

외국무역의 효율성 문제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이론이 공헌이 서로 이용될 수 있는 가치의 여부는 얼마나 있는 것일까?

가격메카니즘, 환율, 관세, 국제수지균형, 자본유동, 소득효과, 경기순환 등에 관한 일련의 자본주의 경제이론이 사회주의 국가간의 교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나 사회주의 이론과 자본주의 이론이 공통의 관심을 갖는 것이 수요의 탄력도, 교역조건의 문제 및 비교비용의 이론이라 볼 수 있겠다.

#### 4. 비교생산비 이론

비교생산비 이론의 창시자는 리카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의 근간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생산에 특화하고 비교우위가 없는 상품은 수입하면 국가들의 총 복지가 증대하리라는 것이다. 물론 공급부문에 치중한 이 이론에 입각하여 수요부문을 도입하면 쉽게 이를 일반화 할 수가 있다.

이 이론이 자본주의 무역이론의 근간이며 사회주의 경제학자들로부터는 특히 1950년대 후기부터 크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이론은 물론 그 가정이 경제적 자유주의 (laissez-faire)의 산물이며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이 이론은 가격이 실질경제비용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의 물가정책이나 관습은 생산요소시장이나 생산품시장을 막론하고 자유시장이 운용되도록 허용하지 않고 물가계획위원회에서 중앙집권적으로 물가를 고정시키고 있다.

부족현상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며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결핍관념은 맑스경제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이 이론은 또한 생산요소 가격이 한계생산과 동일하며 생산품가격이 한계비용과 같다고 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으나 사회주의 경제이론에서 한계관념은 또한 생소하며 물가는 변동하는 시장조건

에 반드시 순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계획당국이 물가조정을 도모하는 때 그 조정목적은 생산을 규제할려는 데 있지 않고 분배를 규제하는데 있다. 또한 국내가격은 외국가격으로 부터 격리되어 있다.

둘째 계획경제에서 무역은 일반경제계획에 알맞도록 미리 결정이 되어있게 마련이다. 수입과 수출이 당시의 가격차이에 근거하여 기업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수입량이 우선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출량이 계획되게 된다. 특정상품간의 상대가격이 계획기간중 변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일단 확정된 계획은 상대가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사회주의 국가들이 운영하는 환율은 반드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을 연결하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 국가들은 모두 강력한 외환통제를 행하고 있으며 공공환율에 의하면 모두 과대 평가되어 있다.

환율이 이와같이 국내와 국제가격관계를 지해하고 있다.

네째, 비록 비용이 비우위성이 지배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균형된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이를 무시한다.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농업및 경공업부문이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제조업산업의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초기에 특정산업에 있어서 상대비용의 비우위성이 존재하더라도 균형경제구조내에서 장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가정이 있다.

그뿐 아니라 사회주의국가들의 교역의 상당액은 쌍무협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여간 사회주의경제학자들에게 비교비용이론은 미개발국가의 경제적 침투를 항구화 시키기 위한 편리한 이론적 합리화라 보고 있다.

오늘날 후진국가의 공통점은 비교생산우위를 가진 몇개의 농산물을 특화하는 국가들이라고 보는 그들은 비교우위성이론에 입각한 국제간의 산업특화는 경제성장도가 다른 국가간에는 이러한 차이를 더욱 항구화 시키며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비록 사회주의 이론가들이 비교우위이론을 미개발국가의무역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부하였지만 그를 대처할만한 이론을 제시해 오지는 못하고 있다.

## 5. 사회주의 국가의 무역 형태

중앙집권적 계획의 그 특징을 이루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역의 형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 계획의 특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러한 국가에서의 계획은 중앙정부에 의한 직접통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임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가격이 부족현상과 무관계하다.

셋째, 중앙 계획은 초완전고용계획이며 아울러 빠른 경제성장계획이다. 이러한 중앙 계획의 특징의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하겠다.

### 5.1 자급자족경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크기와 자원을 보유한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국민총생산에 점하는 무역의 비중이 적다는 것은 일반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자급자족의 이유에서만 기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합리적인 혹은 비합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포착하는 이윤획득의 무역기회를 자주 피한다 할 수 있다. 그 첫째 이유로는 계획시행에 있어서 중앙통제에 의한 직접분배(자원)조직의 탓으로 중간생산물 공급조직에 어느부문에서건 실패가 야기되면 이것이 계획작성자가 그 조직에 다른 부문까지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물론 시장경제에서도 공급면의 차질을 조정하여야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이지않는 손에 의하여 평탄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몇명의 담당관리가 이러한 차질을 조정하는 책임을 지게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계획작성자들이 그들의 직접적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외국과의 무역부문에서 야기될 차질에서 계획을 격리시킬려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보겠다.

둘째, 어느 국가이거나 안보의 이유로 경제권의 위협을 배제하기 위하여 적정자유무역량 이하에서 교역을 하고 있다.

셋째, 국내가격의 무질서한 책정이 비교우위성 산업의 선정을 어렵도록 한다. 이 사실이 무역량을 감퇴시킬뿐 아니라 비경제적 교역이 이루어지게 한다.

넷째, 개인기업경제와 달라 산업의 국유화로 무역에 대한 편견이 나타난다. 개인기업체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교역을 금지하지 않는한 이윤획득의 기회가 보일때마다 교역이 행하여지나 산업이 국유화되고 국가가 경제활동을 직접규제하게 되면 정부의 명시적 결정이 없이는 결코 교역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때문이다.

## 5.2 무역독점

국가의 무역독점행위는 무역행태에 대략 세가지 결과를 도래시킨다.

첫째, 무역이란 필수 불가결의 수입품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가

며 수출이란 수입을 지불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국가의 관심은 고용효과를 갖는 수출에 더 있다 볼 수 있겠다.

둘째, 무역독점이란 수출과 수입이 물물교환의 의미로 상호의존적이라 본다.

이윤율이란 개개 수출품과 수입품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조건에 의하여 평가된다.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불균형적인 환율과 비합리적인 국내가격에도 불구하고 교역을 가능케 한다 보겠다.

세째, 국가의 무역독점이 존재하는 한 관세는 필요하지도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헛 존재한다 하겠다.

### 5.3 非兌換性과 쌍무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화폐는 兌換性이 없으며 域内(비록)무역은 쌍무수지 결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행하여진다.

이러한 비태환성의 원인은 서구경제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경제성장, 초완전고용계획 등 이외에도 두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계획작성자가 외국인에 의하여 유발될 계획안된 교역을 측정키 곤란하다.

둘째 비록 계획에 차질이 올 우려가 없다 하여도 국내가격의 비합리성 때문에 외국인이 자의로 국내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내가격이 실제비용이거나 보다 낮을때 수출

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것인 때문이다.

비태환성은 항상 쌍무주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역국가가 타국의 화폐를 보유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보유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을 때 국제수지는 쌍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 6.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 메카니즘

고정환율제도하의 순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무역부문의 外生的 파문은 소득, 화폐공급, 가격, 외환보유고, 자본유동 등등의 변화를 통하여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이러한 변화는 그 나라의 무역부문과 교역대상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반향을 무역조정메카니즘이라 한다. 이러한 조정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한 직접적 통제없이 경제가 국제수지의 균형점을 지향하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라도 케인즈학파적인 가정을 세운다면 이러한 조정메카니즘이 자유로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로 조정메카니즘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국제수지를 다른 방법에 의하여 통제할 필요성이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국제수지란 시장균형에 의하여 형성된것이라기 보다 통제된 불균형상태라 할 수 있다. 자유스러운 조정메카니즘을 방해하는 케인즈학파적 가설의 주목표는 완전고용과 안정적 일반가격의 유지라 할 수 있고 이는 주로 재정 및 금융정책에 의하여 청취된다.

이러한 정부정책이외에도 국제수지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임금과 가격의 下向更直性에도 없지 않다.

사회주의 경제의 목표가 국제수지 조정메카니즘을 영향지우는데 여러가지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무역부문이나 기업체간의 거래를 통제하기 위하여

간접적 통제방법이나 자유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통제방법을 더 즐겨 이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의 조정메카니즘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한다. 비록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사회주의국가의 국제수지 조정메카니즘의 작용을 소득, 가격 및 환율을 중심으로 설명해 본다.

우선 이러한 조정메카니즘의 작용을 관찰하기 위하여 가정을 세워 본다. 예로 수출시장의 손실이 外生的으로 일어나 국제수지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가정하자.

#### 6.1 소득승수효과

고전학파들의 경제모델에서는 수출의 감소는 소득승수효과 크기에 따라 소득의 감소로 나타나며 소득의 감소는 수입의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와 저축과 소득과 함수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때 투자의 감소까지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수출감소로 연유된 국제수지의 악화상태를 호전시킨다.

소득의 감소는 불완전고용상태의 경제라면 실업을 초래할 것이고 완전고용 내지 인플레이상태하의 경제였다면 실업이나 실질소득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반면에 가격 및 화폐소득효과의 감퇴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소득의 감소요 그로 인한 수입, 소비 및 투자량의 감소는 얼마나 실질소득에 민감한가 혹은 환폐환산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실질소득에 민감한 경우에는 지출은 가격이나 소득과 비례적으로 감퇴할 것이고 환폐환산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지출의 감퇴가 급속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제수지 조정이 불완전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국민소득방정식을 통하여 쉽게 설명된다.

즉,

$$y = C + I + X - M \quad (1)$$

$y$ 는 소득,  $C$ 는 소비,  $X$ 는 수출 그리고  $M$ 는 수입을 의미하는 데 소비함수, 투자함수 및 수입함수를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C = a + cy \quad (2)$$

$$I = b + iy \quad (3)$$

$$M = d + my \quad (4)$$

$c, i, m$ 은 각각 한계소비성향, 한계투자성향 및 한계수입성향을 나타내며,  $a, b$  및  $d$ 는 각각 종축 절단점의 가치이다.

(2)-(4)를 (1)에 대입하여  $Y$ 를 풀면

$$y = \frac{X}{1 - c - i + m} = \frac{X}{s + m} \quad (5)$$

$s$ 는 한계저축성향을 나타낸다.

만일 (5)에서 수출( $X$ )의 감소가 나타나면 소득( $Y$ )의 감소가 연유되고 이것이 (2)-(4)를 통해 소비, 투자 및 수입의 감소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국제수지가 호전할 것이다. 국제수지의 역조가 얼마만큼 호될 것인가는 수출요소인 한계수입성향에 달렸다 할 수 있다. 만일 한계수입성향만이 국민소득 순환과정에서 유일한 수출요소라 가정한다면 (즉 한계저축성향이 0이라 가정하면) 수출의 감소로 연

유된 국제수지의 역조는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조정메카니즘 이외에 가격이나 기타 조정메카니즘, 혹은 직간접적 통제에 의하여 국제수지에 균형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케인즈경제모델에서는 더 감소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불완전고용상태의 존재를 가정하는 이 경제모델에서 負의 소득효과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금융 및 재정정책을 이용하여 수출의 감소로 영향받은 소득부분을 보완하게 된다.

사회주의 경제모델에서는 직접적인 소득효과가 적을뿐 아니라 승수효과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파인이 아니다. 우선 실질국가생산의 생산 및 분배는 정부가 직접통제방법에 의하여 수행하므로 고전학파나 케인즈경제이론에서는 같은 한계성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만일 수출의 자발적 감소현상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때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되찾기 위하여 수입을 감소시킨다던가 혹은 다른 수출(금을 포함한)의 증대를 꾀할 것이다. 금이나 기타 수출품이 감소된 수출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이론상 소득효과는 없을 것이다.

수입의 감소로 국제수지의 역조를 막는다 하는데 이론상 균형된 무역량의 감소는 균형예산승수효과 때와 비슷하게 負의 소득효과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수출이나 수입만이 단독적으로 변화하는 때 나타나는 승수효과보다 훨씬 적은 약 1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균형무역 승수효과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원의 총 고용을 정부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탓에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수출의 감소현상이 일어나면 수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연유된 실업자가 다시 곧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이러한 비고용 노동자원의 일부가 그전까지 수입되던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도록 이전시킬 것이다.

비록 이러한 소득효과가 국제수지 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역량의 대부분을 접하는 사회주의 국가간의 교역에 있어서 무역수지를 기할 수 있으나 하는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없지도 않다. 왜냐하면 이는 쌍무주의의 탓이다. 예로 한 사회주의 국가(甲국)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乙국)에의 수출이 50%로 갑자기 감소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러한 때 소득효과가 제대로 작용을 한다면 甲국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이 수입감소는 甲국의 전체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쌍무교역협정에 의한 감소현상이 乙국으로 부터의 수입에만 제한되어야 하는 사실에 상치되어 甲국의 국제수지 균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게된다.

이와같이 소득메카니즘은 외국부문이 외생적 영향을 받는데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이용될 수 있다. 이 메카니즘이 가장 잘 효과있게 작용하는 것은 완전 고용하의 고전적 경제모델이며 불완



전고용하의 케인즈모델에서는 비교적 덜 작용하나 사회주의 경제모델에서는 거의 그 효과가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같이 소득효과가 제대로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 다른 조정메카니즘, 즉 가격이나 환율등에 조정부담이 떨어지게 된다 하겠다.

## 6.2 相對가격

국제수지 조정기구로서 가격메카니즘에 있어서 사회주의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와 제일 크게 차이나는 점은 국내가격이 국제가격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순수한 자본주의경제에서 수출수요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고 가정하자. 수출가격이 감소하며 따라서 수출산업의 실업율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생산요소의 가격과 상품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때보다 수출량의 감소가 적을 것이고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였으므로 수입대체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같은 두 현상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다시 가능케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내상품가격과 요소가격이 탄력적이라는 고전학파적 가정으로 다시 완전고용이 성취될 수도 있다.

완전고용에의 복귀는 수입의 증대를 유발시켜 국제수지 적자물도래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완전고용시의 실질소득이 불리한 교역조건에 이유로 낮아졌고 국내가격이 상대적으로 국제가격

보다 낮아 이때의 수입은 그 전보다는 적을 것이다.

가격이나 요소가격의 下向更直性을 그 가정으로 삼는 케인즈모델에서 국제수지 조정메카니즘으로서의 가격효과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하겠다.

전술한바와 같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완전히 분리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교역을 행하는데 국제가격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국내가격은 결핍가격 ( Scarcity Price ) 이 아니며 또 이러한 가격으로 부터 일관성있게 차질이 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국가와 교역을 행하는 때 그들의 무역가격은 국제시세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간의 교역에 있어서 국제가격의 탄력성은 거의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간의 교역이 자본주의국가간의 교역보다 더 우수한 점이란 바로 이러한 가격의 안정이라 보는 사회주의 이론가들이 많다.

사회주의 국가간의 교역에 있어서 가격이란 국제가격을 그 기점으로 삼고 출발하나 일단 정해진 가격은 국제가격과 같이 변하지 않으며 대개 같은 가격이 몇년씩 상품교역의 기초가 되곤 한다. 물론 이와 같이 국제무역에서 장기간 유지되는 고정가격을 국내상품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상당한 기간동안 고정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나 변동하는 경제사정에서 가격의 안정이란 건전한 무역관계를 저해할 뿐이라는 것은 부언의 여지 조차 없다 보겠다.

비록 가격의 탄력성이 존재한다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존재하는 때와는 두가지 큰 차이를 노정시킨다 볼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가격의 탄력성이란 국내 및 국외시장의 균형이 지향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무역가격의 효력성이란 국내계획의 물량적 균형 (Physical balance) 을 달성시키는 역할에 더 중점을 두게되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수출 및 수입가격의 변화가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수출가격이 오르고 이윤이 많이 생기면 생산과 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마련이나 만일 수출가격이 내리고 이윤이 적게 생기면 반대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수출이나 수입가격의 변화는 자원배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무역부문으로 부터의 신호에 국내부문이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6.3 외환율

환율의 변동이나 자유 변동 환율제는 국제수지 불균형의 애로를 타개하여 주는 중요한 방법중에 하나라 하겠다.

인프레 경제 상황이 아니고 가격의 탄력성이 있는데 평가절하는 외국인에게 수출품의 가격을 주려주어 수요를 늘리며 내국인에게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 수요를 줄이므로써 국제수지상의 적자를 제거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명목상의 고정환율을 장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사회주의 국가의 교역에 있어서 환율은 국제수지 조정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고 외국환 가격을 국내환 가격으로 계산하는 계산단위로서의 역할 밖에 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명목상의 환율은 무역에 관해서 경제적 의의가 없으며 국내상품가격이 외국의 경제조건에 무반응하며 국내가격의 변화가 교역관계에 무관계하고 무역가격은 단지 외부 조건에만 부응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환율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국제수지 조정의 한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 6.4 국제수지 조정메카니즘

이상에서 무역부문에서 유발되는 외부적충격이 어떻게 사회주의 경제에 의하여 조정(단기적)될 수 있는가 하는데 관해 살펴 보았다. 계획수립자의 목표가 국내의 미시적 및 거시적 균형의 유지, 직접통제에 관한 선호 및 쌍무교역균형의 필요성등에 있으므로 자연히 국제수지 조정의 부담은 무역부문이 지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국내경제 특히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은 국의 부문으로 부터의 충격으로 부터 의식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 그전보다도 더 심한 불균형상태에 이르도록까지 할 우려가 없지

않다.

완전고용이 지상목표이고 또 모든 한계성향의 경제효과를 제거한 사회주의 경제에서 소득효과는 거의 금지되어 있다 하겠다.

단기적으로 미시적 균형이 지상목표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수입수요는 완전히 가격 비탄력적이게 되며 수입을 위한 수출공급도 비탄력적이 된다. 교역조건의 악화로 수출의 증가가 필요되는데 이는 국내경제의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에서 균형을 이룩하도록 해주는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은 사회주의 국가의 처자본주의 국가 교역량이 비교적 적고(즉 수출공급 및 수입수요의 탄력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변적 무역이 행해지므로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사회주의 국가간의 교역에는 결여되어 있다. 가격이 장기간동안 고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국내의 미시적 균형의 필요성이 서로의 국제수지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입수요를 탄력적이거나 혹은 수출공급을 탄력적으로 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쌍무주의와 비태환성이 더욱 조정의 가능성을 희박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국제수지의 조정메카니즘을 둘러싸고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메카니즘이 어떻게 다르며 어느 한도내에서 그 작용범위를 확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양태는 지난 반세기동안에 급격히 변질하여 지금은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계획

경제나 정부의 참여를 통한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수가  
단연 우세하다 봄이 옳다 하겠다.

이러한 설정하에 어느정도로 순수자본주의의 고유한 국제수지 조정  
메카니즘이 그 작용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것도 문제  
이다.

비록 케인즈적 가정이 어느 정도 순수한 자본주의이론의 기초가  
되는 가정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데 異論이 없겠으나 이 이론  
또한 공업선진국의 불황 경제를 설명하고 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 비슷한 문제를 내포한 발전도상국에의 적용타당성에 대  
해서 문제가 없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개발도상국의 국제수지  
조정메카니즘은 특정 목표의 유지를 위하여 무역부문을 완전히 국  
내부문에 종속지우는 사회주의 국가의 국제수지 조정메카니즘 보다  
훨씬 더 유통성과 탄력성이 있는것이라 보아 과히 틀림이 없는  
것이다. 다만 그 탄력성의 정도가 얼마나될 것인가에 대한  
量的 크기에 대한 추정은 어렵고 이러한 나라에서도 직접통제방법  
에 의한 국제수지의 조정을 불사하는 것은 아님만큼 그 효과들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 하겠다.

## 7. 북괴의 국제수지

### 7.1 북괴의 무역

북괴무역의 특징은 사회주의국가의 일반적 경제양상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 보아 틀림없겠다. 그들의 무역은 국내경제에 종속된 국가관리에 의한 것으로 자급자족 위주이면서 쌍무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북괴는 7개년계획기간(1961-1970년)중에 그전까지 주로 수출품목이든 원료나 반제품을 지양하고 사회주의 공업화에 따라 반제품 내지 완제품의 수출을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수출의 필요성은 북괴의 경제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외화획득에 있다 하겠다.

북괴의 연도별 수출입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1960년을 기준으로 할때 1969년에 수출은 99%의 증가를 보였으며 수입은 13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그들의 국민총생산(혹은 그들의 개념인 사회 총생산)과 비교하여 본다면 1961년부터 1969년사이에 평균 10%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총생산의 약 10%가 수출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입의 처GNP비율은 13%(1969년)이다. 1969년의 수출입의 처GNP 비율은 23.8%인데 이를 경제개방도(Economic Openness)로 환산하여 보면 약 12%가 된다.

수입상품 및 수출상품의 구성은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1>

북괴의 수출입

(단위 : 만\$)

연도	수출	수입	%증가(1960=0)	
1955	4,500	6,025		
1960	15,400	16,600		
1965	21,893	23,125		
1969	30,672	38,932	99%	135%

자료 : 국토통일원 북괴경제통계집 (1971.6)

<表2>

북괴 수출입상품의 구성비 (1965년)

(단위 : %)

품목	구성비		품목	구성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기계 및 설비	5.2	30.2	펄프및종이제품	-	10.4
전기자료	2.0	1.0	섬유및섬유제품	0.5	2.0
연료 및 燃油	4.0	19.3	농산물	12.2	10.0
광물類	2.2	4.0	식료품및기호품	6.4	-
흑색및유색금속	39.6	8.2	수산물	3.0	-
화학제품	8.0	8.2	기타	1.8	1.2
建材類	10.0	-			

자료 : 국토통일원 북괴경제통계집 (1971.6)



표2에서 보는 바와같이 수입은 대부분 기계 및 설비부문이 총 수입의 30.2%로 가장 많이 수입된다 하겠으며 그다음에 연료 및 연유로(19.3%) 이 두 품목이 총수입에 접하는 비중은 약 50%인 것이다. 수출의 구성을 보면 총수출의 약 40%가 黑色 및 有色金屬으로 으뜸이 가며 그 다음이 약 12%를 접하는 농산물이다.

섬유 및 섬유제품의 수출이 총수출에 접하는 비중이 0.5%인 것은 특기할만하다 하겠다.

수출입의 지역별 集中度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3 참조)

1969년에 북괴 총수출의 약 72%는 공산국가로 수출되었으며 총수입의 약 77%가 공산국가로 부터 수입되었다.

공산국가로 수출된 총액 2억 1999만불 가운데서 약 56% 이상인 1억 1천 5백 2십 9만불이 소련에 수출된 반면에 공산국가로 부터 수입된 총 2억 8692만불 가운데서 약 20%인 1억 9954만불이 소련으로 부터 수입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969년 북괴가 소련과의 교역에서 상당액의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액면에서 볼 때 소련 다음으로 중요한 교역국은 中共이다. 중공에의 수출과 수입은 5천 5백만불로서 공산주의국가로 수출된 총액의 25%가 중공에 수출되었고 대 공산국 수입총액의 약 19%가 중공으로 부터 수입되었다.

東獨과의 교역이 수출입면으로 볼 때 세째로 중요한 공산국가라 볼 수 있는데 대공산국 총수출액의 4.5%가 東獨으로 수출되며 대공

<表3>

북괴 수출입의 지역별 집중도 (1969)

지 역	수 출	수 입
對共産國 (12 개국)	71.6 %	76.6 %
對自由國 (21 개국)	21.6 %	21.5 %
對中立國 (36 개국)	6.8 %	4.9 %
합	3억 672 만 \$ 100 %	3억 8937 만 \$ 100 %

산국 총수입액의 약 4%가 동독으로부터 수입되었다. 북괴가 동독과의 교역에서도 약 181만불 상당의 수입초과를 보이고 있으나 2500만불 이상의 수입초과를 보인 對蘇 교역과는 비교도 안되는 무역역조 현상이라 하겠다.

非共産國과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1969년) 對일본 수출이 약 3219만불로서 수위를 점하고 있으며 對블란서 수출이 1523만불로 그 다음이며 세째는 392만불의 對서독 수출이다.

같은 기간동안에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도 2416만불로서 수위이며 그 다음이 2277만불의 서독이고 세째가 1360만불이 되는 화란이다.

非공산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아세아지역의 중요성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으나 (특히 수출면에서) 1968년까지 수입을 가장 많이 해오던 아세아지역과의 교역관계가 1969년에는 구라파지역으로

부터의 수입총량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1969년의 이러한 수입패턴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겠으나 서독 및 화란으로 부터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그 중요한 원인이며 그 수입품목이 선박 및 각종 기계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볼때 이러한 추세가 계속하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비록 절대액이 아세아지역의 수출보다 작다하더라도 구라과지역의 수출액의 증가는 특기할만 하다 하겠다. 북괴의 1969년 처구라과지역 수출액을 1968년에 对比하여 본다면 무려 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같은 기간중의 처아세아지역 수출액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表 4 참조)

<表 4 >

북괴의 수출입 (1969)  
(주요국가별)

(단위 10,000美弗)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공산국가	28,642	21,949	비공산국가	10,295	8,723
소 련	19,954	12,529	일 본	2,416	3,219
중 공	5,500	5,500	불 란 서	776	1,573
동 독	1,172	991	서 독	2,277	392
폴 랜 드	571	633	화 란	1,360	263
체 코	380	1,000	홍 콩	42	330
총 계				38,932	30,672

資料 : 국토통일원 북괴경제통계집 (1971.6)

註 : 주요국가만 5개국씩 공산국가와 비공산국가에서 선택기재함

소련과 북괴와의 교역품목을 더 상세히 주요품목만 나열한다면 북괴의 수입품목으로는 1965년과 1966년에 걸쳐 기계와 설비가 2900만불이상, 석유제품이 1500만불 이상, 완성공장설비 및 재료가 1300만불(1965년)에서 1750만불(1966) 휘발유가 600만불(1965)에서 623만불(1966)로서 가장 큰 품목들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동안에 북괴의 처소련 수출품목으로는 鉄이 3900만불(1965)에서 3755만불(1966), 圧延鋼材가 3547만불(1965)에서 3490만불(1966), 高速度切板鋼이 2118만불(1965)에서 1990만불(1966)으로 으뜸가는 수출품목인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1965년과 1966년까지도 북괴는 기계 설비, 공장시설등을 주로 수입해왔고 원료 및 반제품을 소련에 수출한 것으로 보아 7개년 계획기간의 중반기에도 사회주의 공업화의 성과를 건우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겠다.

## 7.2 북괴의 受援현황

1970년말 현재 북괴의 수원총액은 19억 8182만불이며 이 중에서 15억 1307만불(76%)이 무상원조이고 4억 6875만불(24%)이 借款이다. 원조국가로는 소련을 비롯한 中共, 東獨,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의 공산국가이며 총 원조중 약 58%(무상과 차관을 합쳐)가 소련의 원조이며 27%가 중공의 원조이고 나머지 15%가 공산제국으로 부터의 원조이다. 7개년 계획기간(1967-70)중의 수원현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表 5 >

북괴의 수원현황 ( 7 개년 계획기간中 )

( 단위 : 10,000 미불 )

국 가	원 조 액	비 고
소 련	8,900	1966.6.경제기술협정(60~70년간제공)
중 공	10,500	1960.10.13차관협정(61~64년간)
계	19,400	

북괴의 차관상환은 주로 농산물이나 광산물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의 자료는 없으나 1964년 9월말 현재 상환잔여차관액이 약 1억 2천만불에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이 소련이나 중공이 제공한 경제원조의 힘을 많이 입은 것으로 추측되며 이와같은 무상원조가 비교적 적은 7개년계획에서 외국부문의 중요성이 어느정도일 것이냐 하는 것은 다만 추측의 영역에 속할 뿐이다.

## 8. 한국의 국제수지

### 8.1 한국의 무역

1962년부터 1970년 사이에 年平均 9.9%의 국민총생산 성장율을 보인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같은 기간동안에 年平均 40.1%를 기록하였고 1950년대의 외국원조에 의존하던 경제체제로부터 자립을 지향하는 경제체제로 급격한 변화를 보였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경제개발정책도 수출위주의 정책으로 수출진흥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였다.

1962년에 겨우 5480 만불이었던 상품수출액도 1970년에 이르러 8억 3520 만불로 9년간에 무려 거의 15배의 수출신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개방도도 1962년의 11.5%로 부터 1970년에는 21.7%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국민총생산에 접하는 무역부문의 크기는 9년간에 거의 10%이상이나 늘어나 북괴의 개방도와 비교하면 (1969년의 약 10% 전후인) 한국의 경제개방도가 거의 곱절이 넘는다고 볼 수 있겠다. 수출입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수출의 증가 못지 않게 수입의 증가도 주목을 요한다. 1962년에 4억 21800 만불로 부터 증가한 수입은 무역적자의 폭을 1962년의 3억 6천 7백만불에서 1970년에는 11억 4천 8백십 만불로 늘려 놓았다. 물론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재 및 각종 원료와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

<表 6 >

한 국 의 수 출 입

(단위 : 만불)

연 도	1962	1966	1970	연평균 (1962-70)
수 출 (상 품)	54.80	250.30	835.20	324.4
수 입 (상 품)	421.80	716.40	1,984.00	981.4
무 역 수 지	- 367.00	- 466.10	-1,148.80	- 657.1
수출증가율 (%)	34.1	43.0	34.2	40.1
수입증가율 (%)	33.4	54.6	8.8	25.2
경제개방도 (%)	11.5	16.2	21.7	32.3

자료.: 한국은행 통계월보

수 없는 탓으로 이러한 무역적자 현상이 계속되어 왔다는데 異論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갖가지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다.

1970년의 수출을 보면 총수출의 79%인 6억 5980 만불이 일반수출이며, 18%에 해당하는 1억 5230 만불이 보세가공에 의한 수출이고 같은 해의 수입을 보면 총수입의 61%에 해당하는 12억 2990 만불이 보유외환 (KFX)에 의한 수입이며 차관에 의한 수입이 4억불 (약 20%) 공공원조에 의한 수입이 1억 6120만불 (약 8%)에 상당하였다.

수출입상품 구성은 다음과 같다. (表 7)

<表 7 >

한국의 수출입상품 구성 (1970년)

(단위: 만불)

SITC	총액	0	1	2	3	4	5	6	7	8	9
수출	83,519	6,554	1,423	9,997	876	59	1,141	22,089	6,147	35,250	35
수입	198,397	31,936	164	40,453	13,597	1,525	16,378	30,591	58,952	4,726	76
무역수지	- 114,878	- 25,382	+ 1,259	- 30,456	- 12,721	- 1,466	- 15,237	- 8,502	- 52,805	+ 30,524	- 41

資料: 한국은행 통계월보

註: 1. SITC 0은 식료품 및 산동물 SITC 1은 음료 및 연료, SITC 2는 비석용 원료 (광물성연료 제외), SITC 3은 광물성연료, 운할유 및 동유사품, SITC 4는 동식물성유지, SITC 5는 화학품, SITC 6은 원료별제품, SITC 7은 기계류 및 운반용 기기, SITC 8는 잡제품 그리고 SITC 9은 미분류에 속하는 품목들임.

2. 사사오입으로 총액이 맞지 않음.



표준 국제무역분류에 의하여 수출과 수입을 대비하여 보면 음료 및 연초부문에서 1천2백59만불의 흑자. 잡제품부문에서 3억5백24만불의 흑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부문에서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특기할 부문은 5억불이상의 적자가 기록된 기계류 및 운반용기기와 3억불이상의 적자가 기록된 비식용원료 및 2억5천만불이상의 적자가 기록된 식료품분야이다.

주요상품별 수출을 개관하면 (1970년도) 중요한 품목들이 가발 및 가눈섭으로 1억87만불(총수출의 13.2%), 베니야 합판으로 9175만불(총수출의 10.9%), 직물계의류로 8891만불(총수출의 10.6%), 쉐타류로 7159만불(총수출의 8.5%)이며 전기기기는 4387만불로 총수출의 5.2%를 점하고 있다.

1965년에 총수출의 1.4%를 점하였던 가발의 급속한 성장과 1%정도였던 전기기기의 성장은 특기할만 하다.

1970년도 주요상품별 수입을 개관하면 쌀수입이 1억4532만불로 수위이며 그 다음이 석유제품수입으로 1억3293만불, 목재수입이 1억2531만불, 소맥수입이 7953만불, 원면수입이 6267만불, 철이 6184만불, 유기화합물이 6167만불 등으로 쌀과 소맥을 제외하고는 대략 원료재에 속한다 할 수 있겠다.

수출입의 지역별 集中度를 본다면 다음표와 같다. (表8)

1970년에 총수출의 75%이상이 미국과 일본에 집중하였으며 총수입의 70%이상이 위 두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對日 수입의존도(총수입의 40.7%)는 주목할만 하다.

<表 8 >

한국의 수출입의 지역별 집중도 (1970)

(단위 : 만불)

중 요 국 가	수 출 (%)	수 입 (%)
총 액	83519 (100)	198397 (100)
미 국	39518 (47.3)	58479 (29.4)
일 본	23433 (28.0)	80928 (40.7)
서 독	2733	6720
홍 콩	2757	1974
카 나 다	1955	2316
말 레 지 아	-	5779
불 란 서	157	5224
필 립 핀	-	4168
이 란	514	3949

資料 : 한국은행, 통계월보

1965년의 수입의 對日의존도는 35.8%이던 것이 5년후 5%나 그 쉐어 (Share)가 증가된 반면에 같은해 39.4%였던 對美 수입의존도가 1970년에 10%나 감소된 현상은 경제의존도가 점차 미국으로 부터 일본으로 이동되어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기록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수출이 75.3%, 그리고 수입의 70.1%가 미국과 일본에 의존토록 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수출면에서 이 두나라와 역사적으로 정치, 문화, 경제면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갖어 수출시장 개척이 비교적 용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공업국인 미국과 일본의 수출구조와 보완적인 한국의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패턴이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보호조치가 없는 한 이 두나라에서 비교우위성을 유지토록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수입면에서 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의 비중이 대폭 체감하였는데 (1962년의 52.1%에서 1970년의 29.5%로) 이는 주로 미국의 무상원조의 규모가 체감해온 탓이며 일본으로 부터 수입의 비중이 1962년의 25.8%에서 1970년의 40.7%로 증가한 것은 1965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간의 교역을 포함한 여러가지 형태에 경제협력도가 더욱 긴밀하여진 데다가 일본의 급속한 重공업화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갖가지 자본재의 공급源으로 더욱 중요성을 띄게 되었고 운송비 절감(최단거리)과 문화적인(일본어의 용이한 이해 등등)등으로 일본이 한국의 수입源으로서의 역할이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점증하여왔던 것만은 사실이다.

## 9. 結 語

전례없는 고도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여온 1960년대에 한국경제는 무역의 수입 및 경제원조로 국제수지상 별로 큰 무리가 없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상원조의 주요국인 미국이 국내외의 여러가지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면서 세계전체 보다 자국의 경제이익의 옹호에 급급하여 소위 신경제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고 美 행정부에 못지않게 美 입법부(특히 상원)에서도 이러한 난관을 유의하고 외국원조법안을 부결시키는 등, 일련의 "미국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조치가 취해지게 됨에 이르러 미국으로 부터의 對韓 무상원조의 혜택이 줄어들것은 말할것도 없고 월남전쟁으로 부터 미군의 철수가 한국 무역의 수입을 격감시키리라는 전망과 아울러 외국으로 부터의 차관액에 대한 원리금부담의 격증등은 1970년대에 한국의 국제수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성장을 적지않이 저해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을 금할 수 없게한다.

더욱이 미국과 중공의 정치적 화해는 양국간에 경제적 유대를 깊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와 같이 경제적 관계가 훨씬 밀접하여 지는 경우 이는 주로 무역과 차관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의 무역전망 및 경제적 성패가 미·중공간의 무역관계 호전에 반사적으로 악영향을 받으리라는 추측도 또한 근거가 아주 없는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집약적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한국과 중공은 상호 경쟁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공의 국내시장은 한국의 국내시장보다 훨씬 커서 소위 규모의 경제를 쉽게 거둘 수 있는 계기가 있는 중공에게 훨씬 유리하다 하겠고 이는 다시 바꿔 말하면 국제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수출전망을 흐리게 한다 할수도 있겠다. 얼마전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후진국의 처분 섬유수출을 둘러싸고 쿼타 설정에 관하여 저지 않은 흥정이 오고 간줄 알고 있지만 비록 이러한 쿼타설정 의 본 목적이 남부 섬유업자들의 압력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정부로서는 중공과의 교역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쿼타를 잠정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중공에게 수출할 미국상품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공이 미국에게 수출할 상품이 뭇인가를 살핀다면 아마 가장 비교우위성을 갖고 교역대상물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섬유류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가 장차 있을지 모르는 중공과의 교역에서 중공의 섬유쿼타를 허용하기 위하여 하나의 복안으로 미리 섬유수출국에게 특정쿼타의 채택을 권고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여튼 무역수지의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1970년도 상품수출이 8억 8천 2백만弗 그리고 상품수입이 11억 2천 9백만弗로서 실제로 달성된 수출액과 계획

된 수출액은 같아하더라도 상품수입액은 17억 6천 1백만 \$로서  
무려 4억 5천백만弗의 차질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한국 국제수지가 북괴와 비교할때 취약점은 무엇인가?

첫째로, 자급자족의 경제체제의 미정비이다. 비록 자급자족의  
경제체제가 생산과 효용의 극대화를 목표로하는 자본주의 경제이론  
과 양립할 수 없다하더라도 해외 의존도를 주려 한국의 통제밖에  
존속하는 갖가지 변수의 外生적 변동의 한국경제변수에의 효과를  
감소시키는데 주력은 하여야 겠다.

이와 관련하여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초를 인용한다.

“.....둘째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국제수지의 개선 및 주곡의  
자급을 실현함으로써 자립적 경제구조를 이룩한다. ....” 여기서  
자립경제와 자급경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연한다.

둘째로는 수입구조가 매우 소비 指向的이다.

북괴의 수입은 대부분이 중간재 및 자본재로서 공장시설이나 기계  
설비에 필요한 품목들이다. 반면에 한국의 수입은 1970년에  
쌀과 소맥의 수입액이 무려 2억 2천 5백만弗(총수입의  
약 11.8%)에 달하여 가장 중요한 單一수입품목으로 나타났다.

기타 중요한 수입품은 자본재보다 원료재에 더 치중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째로는 수출입구조가 너무 미국 및 일본에 밀착되어 있다.

물론 북괴의 경우도 소련과 중공에, 교역량이 편중되어 있으나  
북괴와 이 두나라 사이의 무역은 쌍무주의에 입각하여 수행되는

때문에 심한 무역역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괴와 중공과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1969년의 경우는 양국의 무역수지가 꼭 균형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무역의 처일본 및 처미국 편중도는 북괴무역의 처소련 및 처중공 편중도와 근본적으로 그 불균형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예를 든다면 1970년의 총무역적자 11억4천8백7십8만弗中 약 50%인 5억7천4백9십5만弗이 일본과의 무역적자로 나타났으며 약 16.6%인 1억8천9백6십1만弗이 미국과의 무역적자로 나타났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대한 무역편중도를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들과의 무역역조를 어떻게 말소시키느냐 하는 두가지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하겠다.

네째로는 외국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이라는 막중한 부담이다.

1959년 동양씨멘트회사가 2백만弗의 외국차관을 얻은 이후 1970년말까지 외국차관총액은 28억弗에 달하였고 이 중에서 私用외국차관은 1962년에 겨우 1백80만弗에서 1970년에 무려 3억3천2백만弗에 달하였고 공공차관은 1962년의 1천2백3십만弗에서 1970년 1억4천5백만弗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도 1962년에 1백1십만弗에서 1969년에는 1억1천3백9십만弗에 달하게 되었다.

반면에 북괴는 1964년9월말 현재 상환 잔여차관액이 약 1억2천만불에 상당한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거의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추측될 수도 있으며 또 자료집계에 의하면 7개년 계획기간중

에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차관액이 1억9천4백만弗로 이들 한국의 1969년도 원리금 상환액(1억1천3백만弗)으로 대비하여 보면 한국의 부담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으며 가중할 이 상환액이 국제수지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란 무엇인가? 우선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한국과 같이 "늦게 시작한 나라"에서는 대개 공업선진국이 이미 "재미를 다 보고 버린" 산업이나 상품群 생산에 특화하는 경향이 짙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분야는 배워야 될 기술도 어렵지 않고 생산과정도 비교적 간단하여 어느 후진국에서나 생산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의 상대적 가격은 낮아지게 마련이라(즉 항상 교역조건이 불리할 것이며) 비록 후진국간의 경쟁에서 이기고 상품공급을 개시하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수출키 위하여 올바른 상품을 개발하였다 할 수 없는 때가 자주 있다.

한국과 같이 고도의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기술을 배우기 쉬운 산업체의 상품보다 좀 더 高價의 정밀기계 생산에 특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국제수지면에서나 국가경제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공업육성에 관한 정부의 시책은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둘째, 규모의 경제를 올바로 걸을 수 있는 적정시설에 의한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이 요망된다. 人口過多로 소비자  
단위수도 많지 못하며 소득수준이 높지도 못한 한국에서 국내수요  
의 미흡은 시장의 협소성을 나타내어 얼마나 규모의 경계를 건을  
수 있는 시설의 도입이 가능할까 의문이 없지도 않으나 적정시설  
및 적정조업에 관한 더 깊은 연구가 나오기만 바랄뿐이다.

